

21세기 준비*

김 기 훈
성 심 여 대 강 사

임박한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신의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해 볼 시점에 와 있다.

폴 케네디의 「21세기 준비」는 21세기를 앞둔 지구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30 년간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저자의 이전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이 주로 '민족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인 반면, 이 책은 인구 증가, 세계경제의 통합, 환경의 위기, 기술의 파장 등 '초국가적' 변화의 경향들이 전통적 문제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입

장에서도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세계적 문제들과 그에 대한 선진국 및 후진국들의 시각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류 사회 최대의 시련 : 불균형적 인구 폭발과 이민

21세기를 앞둔 인류 사회의 최대의 시련은 불균형적 인구 폭발에 대한 범세계적 해결책의 문제이다. 저자가 인구 폭증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굶주리는 수억의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관심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주로 가난한 후진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선진

* Paul Kennedy. 1993. *Preparing for the Twenty - First Century*. New York : Random House. (변도은·이일수 역. 1993. 「21세기 준비」.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국들에서의 '출생 결핍'이라는 조건과 결부되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대량의 합법적 내지 불법적 이민을 낳고 있다. 이는 좋게 보면 후진국에게는 인구 압박을 덜고 선진국에게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덜어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초청한 나라들이 구한 것은 '노동력'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민의 대량 유입은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의 입장에서 인종적·문화적 순수성의 손상, 자원의 배정을 둘러싼 문제 등 다양한 우려와 적개심을 낳는다. 여러 나라들에서 이민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균형한 인구 동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노력은 별 실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 승자와 패자

세계경제는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전 인류사에 걸쳐 성장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을 1945년 이후 이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점 더 통합되어 왔다. 그 극적인 표현으로, 통신혁명에 힘입어 하루 24 시간 도쿄-홍콩-싱가포르-런던-프랑크푸르트-취리히-뉴욕-시카고-토론토 등으로 주식 거래가 이어지면서 국제금융

시장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이 범세계화하면서 기업들은 모든 주요 경제권에서 생산과 판매를 꾀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종래의 '향토적 기업' 대신에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통합은 분명히 승자뿐 아니라 패자를 낳는다.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좋은 물건을 골라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들, 적절한 기반 설비와 훈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도시, 지역, 국가), 자신의 지식이나 서비스가 국제적 수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직업인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국적 기업이 공장을 이전해 감에 따라 일터를 잃게 되는 사람들과 고용이 줄어들어드는 지역,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기업 및 이권 단체들은 타격을 받는다.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개방효과'가 아니라 사회 개혁을 위한 엄청난 투자인데, 이를 마련할 방도는 별로 없다. 게다가 통신혁명에 따라 전세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라디오와 TV는 후진국에서 안목있는 소비 대중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지역으로의 이민,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서방적 가치를 거부하는 근본주의를 조성할 수도 있다.

세계농업과 생물공학혁명

1950~84년 기간에 세계 식량 생산의 증대는 인류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빨랐다. 이는 주로 아시아지역의 '녹색혁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 이후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 증가를 앞지르는 장기 추세의 시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후진국의 굶주린 인구를 위해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다가오는 인구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겠는가? 근년에 생물공학이 그 해결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생물공학은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따라서 기술 지식을 공개하지 않거나 비싼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이 주로 국제적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서 그 이용에 별 제한이 없었던 1960년대의 '녹색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만약 후진국에서 '유전자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후진국의 유전 자원을 뽑아서 기업체의 실험실에서 상업용 생물로 변종시킨 다음, 그 개량종을 상당한 이윤을 남기면

서 후진국에 되파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 식량이 남아도는 선진국들은 농촌 유권자를 배려하여 생물공학 기술을 규제하게 될 것인데, 이에 따라 생물공학 다국적 기업들은 식량이 부족하면서 자신의 연구개발을 환영하는 선진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결국, 생물공학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 농업과 그에 종사하는 농민이 조만간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농산물의 무역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자동화를 통한 新산업혁명

오늘날 우리는, 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정에서, 舊來의 '임금노예'들이 마침내 '로봇'('노예'를 의미하는 체코말 'robotnik'에서 유래)으로 대체되고 있는 新산업혁명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新산업혁명의 주역은 영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다.

일본이 로봇 및 자동화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게 된 데는, 여타 산업에서 드러난 일본의 많은 장점들과 더불어 인구 동태라는 특수한 요인이 중요했다.

즉, 일본이 자동화에 집착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나 수출주도형 경제를 위축시킬 기세를 보였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었다. 또한 종신고용제, 탄력적인 재교육과 재배치 체계,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의 연계 등 일본에 특유한 노사관계가 노동자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하여 일본 산업계는 사회적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했으며, 이민 노동자들을 대거 불러들이는 말썽 많은 방식도 회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강한 '엔지니어링 문화'가 있고, 임금수준이 높고, 인구증태의 하강세로 기능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로봇공학이 가장 큰 발전을 보일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이 꼽힐 수 있겠으며, 일부 東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도 자동화에 투자하도록 유도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나 출산율의 꾸준한 하락은 자동화로 접근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독자적인 로봇혁명을 위한 필요나 능력이 없다. 게다가 일부 선진국에서 로봇에 의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해외의 저임금 조립공장의 '임금노예'가 자국내의 '자동화된 노예'로 대체될 수도 있다.

환경 위기 : 남북정치의 문제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석탄과 석유의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산성비, 유해 산업배출물에 의한 강물의 오염, 산림 벌채, 초지의 과잉 방목에 의한 토질 퇴화, 수리사업에 의한 대수층의 고갈과 토지의 염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소지구(小地球)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효과' 등의 환경 문제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오늘날 후진국들이 대규모로 가세하기 훨씬 이전부터 선진국들이 행해 왔던 바이며, 또한 현재도 선진국들의 1인당 환경 파괴도는 후진국의 그것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제 녹색 운동이 일어나서 환경 문제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은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는 부유한 부분과 가난한 부분으로 갈린 세계에서의 남북정치(South-North politics)의 문제를 제기한다. 후진국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처음 공업화할 때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이 후진국의 일반 대중의 운명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이유 중 첫째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대량 이민이라면, 둘째 이유는 후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 활동들이 지구의 생태계 파괴에 대규모로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에의 대비

오늘날의 지구촌의 현실을 볼 때, 경제면에서는 세계가 포괄적인 단일 활동 단위로 조직화되어 온 반면, 정치면에서는 민족국가로 분할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 추세 간의 긴장이 온갖 요동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인구 증가, 환경 문제, 기술 변화, 경제 통합 등의 새로운 범세계적 추세들이 중요성을 더해 가면서, 민족국가가 이에 대처하는 기구로서는 부적절함을 보이는 여러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를 대체할 마땅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족국가 간에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힘을 겨루는 新중상주의적 질서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들 중에서 21세기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로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東아시아의 무역국들과 독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의 일부 나라

들, 그리고 전체로서의 EC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게 공통되는 점은, 높은 저축율과 설비투자 수준, 우수한 교육 및 재교육 제도, 변호사보다 엔지니어가 많은 제조업 문화,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잘 설계된 고품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결의, 그리고 유형 상품 교역의 일관된 무역 흑자 등이다.

21세기에 대비함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다. 기술 혁신은 종래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하므로 교육과 함께 재교육을 위한 국가적 틀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크다. 또 교육은 범세계적 추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나라의 기술과 기반 설비를 재정비하고, 경우에 따라 기득권 층에 도전하며, 갖가지 구습을 타파하고 통치 구조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재검토하고 재교육하고 재정비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또 한차례 역사의 낙오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